

野 “선거연령 18세로 낮추면 쟁점법안 연계”

文 “20대 총선부터 적용” 지도부 회동서 與에 제안 金 “당 의견 묻겠다”... 선거구·법안 처리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5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 야당이 내놓은 ‘선거연령 18세 인하’ 제안을 20대 총선부터 적용하면 새누리당이 요구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의 연계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단민주는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은 연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정의화 원내총무와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쟁점법안을 통과시켜주면(선거연령 인하방안) 연계처리 하되, 이번 총선이 아닌 다음 선거 때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표는 “만약(선거연령 인하안)다 른 법안과 연계한다면 이번(20대) 총선에서 바로 시행해야 한다”며 “만일 다음 선거 때부터 시행된다면 일체 법안과의 연계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또 “정의화 의장도 김 대표에게 ‘문 대표 의견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표는 “김 대표는 ‘돌아가서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이후 김 대표나 새누리당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선거개혁안과 쟁점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쟁점법안과 선거연령 인하를 김무성 대표가 연계하자고 제안했다. 거기에 대해 우리는 대체로 동의를 했는데 그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김 대표의 개인안이라 해서 일축하고 있다”며 “다만 선거연령 인하를 21대 총선부터 한다면 연계할 수 있다는 이런 원수철 원내대표의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 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주최 ‘2016 시민사회 합동 신년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총선부터 선거 연령 변경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전혀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 문 대표와 함께한 비공개 오찬 회동을 언급하

며 “정 의장은 다음 대선부터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하는 선에서 선거구 획정의 지역구 253석안(案)을 심사시키자 했다”면서 “그러나 저는 경제 관련 법, 그리고 노동 5법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회동) 끝났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그동안 양당이 주장하던 것 외에 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전날에도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 “수도권이 200~3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면서 “그럼에도 경제 살리기 위한 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대선 때부터라도 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이번부터 적용하자고 해서(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 vs 정의화 직권상정 재충돌

정 의장 “쟁점법안 연계 불가” 재확인

청와대와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정부 최대 관심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문제를 놓고 5일 정면 충돌했다.

정 의장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다녀온 뒤 기자들에게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법안 연계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고 공개하자, 청와대가 ‘연계’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 정 의장이 ‘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입법부 수장이자 여권의 원로격인 정 의장을 향해 “의정직을 활용해 이미지 정치를 하는 느낌”이라는 등 금도를 넘어서는 듯한 직설적 표현까지 사용했다. 경제난과 청년 구직난을 해결하고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했을 뿐인데 정 의장이 이를 ‘연계’라고 예격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주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가 민생법과 선거법을 연계하거나 선거

법을 발목 잡는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면서 “국회의장은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하는 자리인데, 정 의장이 의정직을 활용해 이미 지 정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 의장이 경제의 어려움과 절박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 같은 청와대의 압박에도 전혀 물러선 생각이 없어 양측의 충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청와대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가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쟁점법안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 한 참모가 ‘공직선거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그렇다면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7대 총선때는 37일전 타결... 위헌소송·재확정 요구 빗발

선거구 획정 지연 악순환

‘결투의 링’을 정하는 선거구 획정이 매년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끝에서 극적 타결되는 악습을 관행처럼 이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선거구 획정 결과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부합한다기 보다는 여야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주고받기에 의해 급하게 처리돼왔고,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위헌소송 등 재확정 요구가 뒤따랐다.

이번에도 여야는 또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특히 헌법재판소의 2대 1 인구편차 재조정 결정에 따른 선거구 무효 사태까지 빚어지는 와중에도 해를 넘기도록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결국 중재에 나선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까지 꺼내 들며 제시한 8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지면서 선거구 무효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역대 선거법 처리 사례를 보면 이런 악순환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다. 매년 해를 넘겨 선거의 문턱에 와야야 획정이 마무리됐다.

15대 총선(1996년 4월11일)의 경우 선거를 73일 앞둔 그해 1월 27일야회 획정안이 담긴 선거법이 개정됐고, 16대 총선(2000년 4월13일) 때는 선거를 65일 앞둔 2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최악은 17대 총선(2004년 4월15일)에서였다. 선거를 37일 앞둔 3월 9일야회 극적으로 처리돼 출마자의 선거운동 및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큰 불편을 줬다.



野, 위안부 협상 외교부 항의 방문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협상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운데), 유승희, 남인순, 신경민 의원이 5일 서울 중로구 도렴동 외교부를 방문하고 있다.

18대 총선(2008년 4월 9일) 때 역시 선거를 47일 앞둔 2월 22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19대 총선(2012년 4월 11일) 때도 선거를 44일 앞둔 2월 27

일야회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이런 추이를 보면 올해 또한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획정이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

로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만큼 정치권을 향한 비판은 어느때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 3명 등록

오는 4월 13일 재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광주시 동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5일 현재 동구청장 예비후보에는 임영일(59) 전 동구 부구청장과 양해령(여·53) 전 시의원, 오형택(53) 조선대의대 교수 등 3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들 예비후보 당직은 모두 무소속. 양해령 전 시의원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공식선언했다.

이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사무소를 마련한 뒤 각종 행사장 등을 찾아가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과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이날 현재 자천타천 동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대략 10명.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률이 저조한 이유는 정치판이 ‘일어다야’(一與多野) 구도로 바뀐데다 호남신당 돌풍 등의 변수로 총선 판세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안갯속 판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 마감일은 오는 3월 23일까지다. 공식 후보자 등록은 같은 달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4·13 총선 현장

“위안부 굴욕합의 무효... 재협상해야”

김명진 광주 남구 예비후보

김명진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5일 한일 외교장관급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것과 관련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성명서에서 “6일이면(피해자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강행한지 24년째”라면서 “1965년 한일 협정에 비견되는 12·28 한일위안부 굴욕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회담 합의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데도, 합의엔 진상규명과 책임자 심판, 명확한 사과 및 피해자 배상 등의 내용이 전무하다”면서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은 시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아픈 역사를 성찰하려는 흐름을 거스르는 반역사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 PASTA/ PIZZA/ 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말하는 법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면접준비실전과정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활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